

NORTH KOREA TODAY

오늘의 북한소식 2007년 4월 25일 |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호
전화 02)587-8996 | 전송 02)587-8998 | E-mail : goodfriends@jungto.org | www.goodfriends.or.kr

목 차

- 홍역, 완전 소멸 안 돼
- 중국산 홍역 약품 구입 지시
- 평양도 위생검역증 필요
- 해외 대표부, 자녀 귀환 미적미적
- 자녀귀환, 고스란히 외무성 부담
- 농민 시장 정돈 사업 실시
- 농사 종자 분실 경계령
- 법 기관 담당자 대상 보복 늘어

홍역, 완전 소멸 안 돼

북한 당국에서는 지난 3월 15일 대대적인 예방 접종으로 드디어 홍역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으나, 사망자 소식은 아직도 들리고 있다. 병원에 입원해있던 환자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아 거의 퇴원한 상태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많아 홍역이 완전히 소멸되지 못한 상태이다. 전국의 홍역 사망자 숫자를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망자 소식이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다.

중국산 홍역 약품 구입 지시

북한 당국에서는 이번 홍역 치료를 위해 한국에서 지원된 약품과 중국산 약품을 모두 사용해 본 결과 중국 약품의 효력이 낮다고 말하며, 중국 약품을 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평양시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는 중국산 약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 지시에 대해 한 간부는 “값싼 중국 약품을 구입하려

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국 약품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 중국 약품의 질이 안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이를 끝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도 위생검역증 필요

북한 전역에 퍼진 홍역 등의 전염병이 평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기야 평양에서도 위생 검역증 소지 여부를 단속하기 시작했다. 한 해외 파견지는 얼마 전 잠시 평양에 들어갔다가 일주일 동안 무려 십여 차례 이상 단속을 당했다. 할 수 없이 아는 의사에게 돈을 주고 검역증을 떼고서야 겨우 일을 볼 수 있었다. 북한 보건 당국에서도 계속 전염병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상태이다. 한국에서 약품을 지원받고 있으나 충분치 않아 중국에 나가있는 대표부와 각 회사들을 통해 홍역 및 기타 질병의 약품들을 수입하고 있다.

해외 대표부, 자녀 귀환 미적미적

4월 1일 전까지 해외 주둔 대표부의 자녀 귀환시키라는 조치가 떨어졌으나 현재까지 일부 대표들만 자녀를 귀환시킨 상태이다. 대다수 대표들은 본국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재외 대표부들에게 5세 이상의 자녀는 되돌려 보내라며, 이를 어기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대부분의 대표들은 부모 없이 자녀만 보내면 요즘처럼 어려운 상황에 누가 돌봐주겠느냐며 근심에 쌓여있다. 행여나 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 본국의 눈치를 보며 자녀를 데리고 있다.

자녀 귀환, 고스란히 외무성 부담

해외대표부 자녀 귀환 조치와 관련해 외무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원래 해외대표부의 해외 파견시 자녀 1명 외에 다른 자녀들은 본국에 두게 되어있다. 외무성에서는 본국에 남은 자녀와 보호자에 대한 부양비, 즉 식량배급, 교육비, 주거비, 기타 생활비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외무성의 부담 비용 역시 늘어나게 됐다. 해

외대표부들 중 누구도 자녀를 지방으로 보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모두 평양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장 평양 시내의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 한 간부는 “아무리 당국이 (귀환시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해도, 해외 나가 생활하는 사람들이 토대가 좋고 연줄 있는 사람들인데 대우를 잘 못할 수 없지 않냐”며 현실적으로 집행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농민 시장 정돈 사업 실시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 농민 시장 정돈 사업이 진행됐다. 우선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연령이 45세 이상으로 규정됐다. 또한 장사 물품은 20만 원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집행을 위해 농민 시장 단속 상무를 조직하고, 규정 위반시 법으로 처벌한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월 하순 인민보안성 포고령으로 전국에 선포됐다. 당국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젊은이들이 돈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농사 종자 분실 경계령

전국 각지는 본격적인 봄철을 대비해 봄 농사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농촌 일부 지역에서 농사 종자가 분실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관리위원회와 리당에서는 시 경영위원회에 경비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경연선지역의 경우 각 시에서는 국경경비대에 합동 경비를 요청해 무장 경비를 서고 있다. 얼마 전에는 단 한 알의 종자라도 훔칠 경우 가족 전체를 추방시킨다는 포고문이 나붙기도 했다. 포고문을 본 주민들은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어디가나 백성들 살려준다는 소식은 없고 보이고 들리는 것마다 무시무시한 소리뿐이라 기를 펴고 살 수가 없다”고 수군댔다.

법 기관 담당자 대상 보복 늘어

군 이하 단위의 검찰, 보위부원, 보안원 등 이른바 법 담당자들이 계속되는 단속과 검열로 주민들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 200개 군의 검찰, 보안원,

보위부원들의 생활은 시 단위에 비해 곤란한 형편이라,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공생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생활이 곤란해진다. 그런데 윗선에서 집중 단속 지시가 내려와 단속과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보복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사방이 캄캄한 저녁에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불시의 공격을 당해 심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는 당사자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다. 부모 형제, 자녀 등 가족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한 사법기관 일꾼의 아내는 폭행을 당해 식물인간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아이들이 유과당하는 사건도 일어난다. 국경연선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 결국 시체도 찾지 못한 사건이 벌써 34건 가량 발생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누구의 범행인지 알 수 없어 더 이상 조사를 진척하지 못한다. 가족들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뽀족뽀족하게 살면 안 된다”며 너무 나서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그래서 군단위에서 문제가 생겨도 아래에서 알아서 무마하려고 한다. 해당 법 기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밤길에 단독으로 다니지 말라는 주의를 주고 있다. 지역이나 단위에 따라 조별로 무리지어 다니도록 권고하는 곳도 있다. 개인적으로도 가급적 저녁에는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다.